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12. 20.(화) 국무회의 종료 후	
담당 부서	구조개선정책관 구조개선정책과	책임자	과 장	진선영 (02-2100-2910)
		담당자	사무관	성보경 (02-2100-2914)
			사무관	남창우 (02-2100-2903)
			사무관	이준협 (02-2100-2904)

선제적 자금지원 체계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「예금자보호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
주요 내용

- 금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‘금융안정계정’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예금자보호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.
- 이를 통해,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다수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, 부실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금 보험공사가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등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금융안정계정 도입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·예방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하는 것으로써, 금융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신속한 지원을 받아 금융 제도의 안정성이 보다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1 추진배경

-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,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
- 특히, 금융산업은 상호 연계성이 높아 특정 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금융 부문간 위기 확산을 적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,

-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제도는 부실발생 이후의 사후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

* 미국·EU·일본 등은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제도를 구축(☞ 참고)

- 이에,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·마련하였고,

- 금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예금보험기금에 '금융안정 계정'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예금자보호법」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.

<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주요 경과 >

-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**금융안정계정 도입(안) 발표**(‘22.7.26., 금융위)
-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관련 **정책세미나 개최**(‘22.8.30., 김희곤의원실·금융위·예보)
- 「예금자보호법」 개정안(정부안) **입법예고**(‘22.8.30.~’22.10.11)

2 주요 내용

가. 금융안정계정의 설치(안 제24조의5)

-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,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합니다.
-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,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 부터의 차입금,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합니다.

< 예보기금 계정 현황 >

은행	생명보험	손해보험	금융투자	종합금융	저축은행	저축은행 특별계정	금융안정계정 (신설)
제24조의3						제24조의4	제24조의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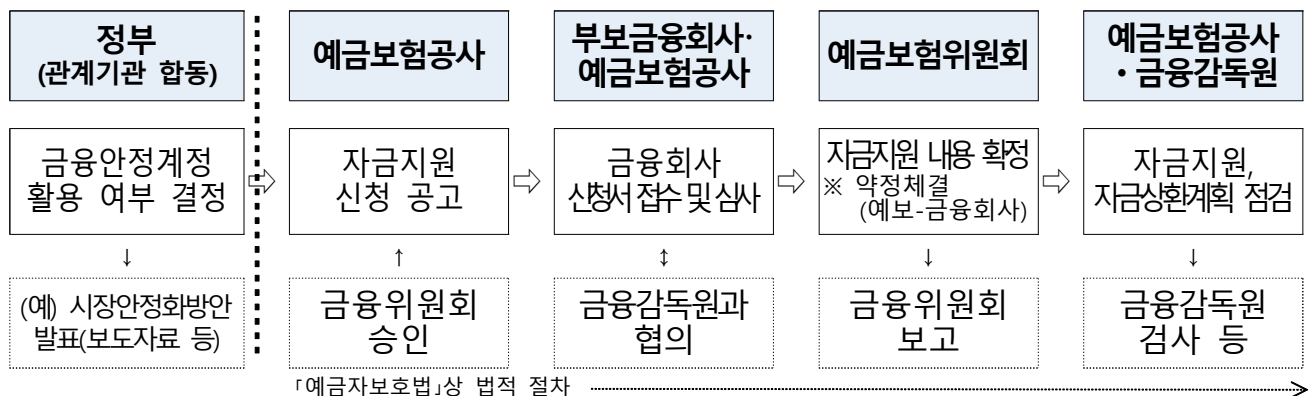
나.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(안 제39조의4)

-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,
 -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부보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.
- 예금보험공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,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심사 및 금융감독원 협의,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합니다.

다.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점검(안 제39조의6)

-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,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- * 예금보험공사는 필요시 금융감독원에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요청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(법 제21조제3항·제8항)

<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안정계정 지원 주요 절차 >



3 기대효과

-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·예방적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지원 체계를 상설화함으로써 제도 도입만으로도 금융시장 및 산업에 대한 안정화 효과가 기대되며,
 -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금융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보다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4 향후계획

-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「예금자보호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년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,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-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동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
- ※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원입법안(「예금자보호법」 일부 개정법률안(김희곤 의원 대표발의, '22.11.18.))이 既발의 중이며, 향후 국회에서 금번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

참고

주요국 도입 사례

- 주요국은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'시스템 리스크' 발생 예방 및 예보기금 손실·공적자금(재정)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既 구축

① (미국) '08년 위기 당시,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해 재무부 (TARP), 연방예금보험공사(TLGP)를 통한 사전적 지원 제도를 도입

TARP* (자본확충) *Troubled Asset Relief Program	자본매입프로그램 CPP* *Capital Purchase Program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내용)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(우선주출자) ■ (대상) 신청한 금융회사 ■ (실적) 707개 회사 \$2,050억 지원 ⇨ \$219억 수익
	자본지원프로그램 CAP* *Capital Assistance Program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내용)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(전환우선주 출자) ■ (대상) 각 금융회사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정부가 강제적으로 확충 ■ (실적) 지원대상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자본을 확충하여 실제 금액 투입은 없었음
TLGP* (유동성 지원) *Temporary Liquidity Guarantee Program	채무보증프로그램 DGP* *Debt Guarantee Program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내용) 선제적 유동성 지원(선순위무보증채권보증) ■ (대상) 부보금융회사 및 그 지주회사, 계열사 ■ (실적) 121개社 \$6,184억 보증 ⇨ \$102억 수익

② (일본) '14년 일본예금보험공사(DICJ)는 '위기대응계장'을 확대 개편하여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지원(채무보증, 대출, 출자) 기능을 추가*

		제1호 조치	특정 제1호 조치
지원 대상	정상 여부	조기시정조치 대상 은행	정상 금융회사
	부보 여부	부보금융회사	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
지원방법		출자	출자, 대출, 채무보증

* (지원사례) 제1호 조치에 의해 리소나 은행에 약 1.9조엔 자본확충 지원('03.6월), 제도개편 후('14년)에는 시스템리스크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지원사례 없음

③ (EU) EU는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'14년 BRRD*를 제정하여 시스템 리스크 우려시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'예방적 공적 지원(Precautionary Public Support)** 제도를 도입

*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, 은행 정상화·정리지침
** 개별국 공적자금, EU 공동의 위기대응기금(ESM) 등 활용 → 자본확충 또는 채무보증

- 부실예방을 위한 대안조치로서 예금보험기금 또한 활용 가능

* 예금보험지침(Deposit Guarantee Schemes Directive) 개정